

## 경제난 극복과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제언(안)

경제무역대국으로의 힘찬 성장 가도에서 하루 아침에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경제주권을 상실한 오늘의 국가경제 난국에 즈음하여, 우리 영등포구 기초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와 책임을 함께 느끼며 작금의 경제위기가 그 동안의 무질서한 과소비와 방만한 기업 경영, 그리고 정책당국의 위기관리능력 부재에서 오는 총체적 원인에 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대책강구를 촉구하며, 특히 정치개혁 없이는 국민통합이나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차제에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치권의 고통분담 동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의회의 뜻을 결집하여 제언코자 한다.

첫째, 국정을 비판하고 시정요구해야 할 국가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가 '97년도 재경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직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장·단기 총 의체와 외환보유고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외환위기 실상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입법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이나 보좌관 증원 등 소모적인 발상에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IMF체제 아래에서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차제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하여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중앙정치권의 불모로 만들 저의로 보며, 동 단위 지역에서 조차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주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의 자율성 그리고 행정의 안정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초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작은 정부 지향과 효율적인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기구조정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원의 정수도 적정선에서 감축하여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1998. 1.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